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43, June 2020

06



국회보

[표지이야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장의 불꽃으로 사라진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승고한 희생을 거름 삼아 피어난, 대한민국이라는 꽃.
그 뜨거운 나라사랑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3, June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문화소통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임익상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상근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문화소통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문화상 국회의장, 대통령과 5부 요인 초청 의장공관 만찬

제21대국회 조선의원 의정연찬회 열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려

특집 제21대국회의 중점 과제 및 생산적 운영방안

12 “일하는 제21대국회 만들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4 “국민 통합 기치로 상생과 협치의 국회 만들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6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하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8 “‘일하는 국회, 일 잘하는 정당’으로 국민 신임 얻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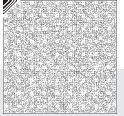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20 길에서 길을 찾다_박상혁 의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김포

24 칭찬합시다_김성원 의원

“정치·정책·정당 모두 변하는 ‘삼정혁신’ 통해 당 쇄신에 힘쓸 것”



- | | |
|---|--|
| <p>26 의원의 좌우명_ 임오경 의원
“정치에서 다시 한번 ‘우생순’ 보여줄 것”</p> <p>28 나의 인생 나의 정치_윤주경 의원
“독립운동가 정신으로 ‘국민 통합’의 길 가겠다”</p> <p>3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p> <p>36 새 법률 소개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의결</p> <p>48 법률 시대를 읽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_ 조의섭</p> <p>50 법 시행 그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p> <p>52 주재관 리포트
일본의 국가공무원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과 그 함의_ 최은규</p> <p>54 만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p> <p>56 국회 뉴스</p> | <p>67 국회스케치</p> <p>68 국회 사람들
춤추다 보니 4년이 갔어요_ 윤호숙</p> <p>70 경제이야기
경제학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_ 이진우</p> <p>72 청년에게 듣는다
빌려 쓰는 청년들이 모여 짓는 집, 달팽이집_ 이정현</p> <p>74 과학을 읽다
냉동 인간이 가능해지려면_ 고희관</p> <p>76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100여 년 만의 귀향과 해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_ 이광표</p> <p>80 역사 속 길을 찾아
전쟁의 역사 위에 피어난 꽃길을 걷다_ 장태동</p> <p>84 생활 속 우리말글
당해 연도일까 당해년도일까_ 김형주</p> <p>85 정치 관련 주요 일지</p> <p>86 편집 후기
제21대국회의 사명_ 이춘규</p> |
|---|--|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제21대국회, 협치 시스템 작동되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8일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5월 28일 국회 중 앙홀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원기념식 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 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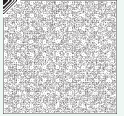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

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 역에 이르기까지 K열풍이 불고 있 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 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 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 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 있고, 이를 후에는 제21대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새로운 국 회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부와 입법 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시스템 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원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연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



문화상 국회의장, 대통령과 5부 요인 초청 의상공관 만찬



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문화상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문화상 국회의장은 5월 21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5부 요인 내외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국회의장 공관에서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희

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상 국회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상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계시고 남은 임기 중 국회와의 일을 잘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며 “이런 때 직접 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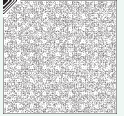
제21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열려



5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1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5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1대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환영사 및 특강을 시작으로, 국회 소속기관별 조직 소개가 있었고 이어 국회의장 주최 오찬이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강에서 “여러분은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 동지로



제21대국회 조선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시연을 해보고 있다.

서 힘을 모으는 데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본회의장 방문과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 ‘의정활동과 대언론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조선의원들은 전자투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시연을 했다.

법안심사 및 국감 제도 등 안내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및 예·결산 심사

와 국정감·조사제도 등 국회운영 개관, 의원실 지원경비와 국회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의회외교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회사무처는 조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의정활동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국회 개원 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의원은 총 139명으로, 의정연찬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의정연찬회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

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명단

구분		국회의원
최우수 (6인)	정치행정 (2인)	김영호, 김해영
	경제산업 (2인)	박명재, 윤관석
	사회문화 (2인)	권미혁, 박광온
우수 (36인)	정치행정 (8인)	강훈식, 광상도, 김승희, 김학용, 송희경, 이명수, 이정미, 정성호
	경제산업 (16인)	권철승, 김규환, 김도읍, 김선동, 김성찬, 박재호, 송갑석, 송기현,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이언주, 정동영, 정우택, 조정식, 추경호
	사회문화 (12인)	김광수,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신상진, 심재권, 윤소하, 윤종필, 이상돈, 임이자, 정춘숙, 조승래

※ 의원명은 가나다 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김해영 의원(이상 정치행정부문), 박명재·윤관석 의원(이상 경제산업부문), 권미혁·박광온 의원(이상 사회문화부문)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광상도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

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국회사무처, 제21대국회 맞아 국회 시상제도 개선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으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및 시상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도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 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뀌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 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17일 이러한 시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제정 규정은 제21대국회부터 시행된다. 🏠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려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 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5월 20일 열린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회는 5월 20일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Post)-코로나 입법 등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제20대국회는 총 9천139건의 법률안을 처리함으로써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 처리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처리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

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포스트 코로나 입법을 통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특집

제21대국회의 중점 과제 및 생산적 운영방안

5월 30일, 제21대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21대국회의 중점 과제와 생산적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일하는 제21대국회 만들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통합 기치로 상생과 협치의 국회 만들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하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하는 국회, 일 잘하는 정당”으로 국민 신임 얻을 것”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일하는 제21대국회 만들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제20대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 섰고, 물리력이 행사되는 ‘동물국회’까지 연출됐다. 일하는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국민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낡은 정치를 심판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불안 속에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 이어 66.2%라는 높은 투표율로 국회가 바뀔 것을 명령했다.

국민의 명령은 ‘국회가 일 좀 하라’는 것이다. 과반이 넘는 큰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준 것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제21대국회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제21대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안 된다. 여야 공히 일하는 제21대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도 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제21대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제21대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전 지구적 감염병의 유행은 전대미문의 경제적 충격을 불러오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깊어질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도 많은 과제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회로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이 많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속의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상시국회 제도화와 복수 법안소위 확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첫째,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연중 상시국회의 제도화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야 한다.

연중 상시국회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고 ‘일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작수 달에만 열리던 임시회를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 11일에 개최하도록 하여 1년 365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안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체계·자구 심사권도 폐지해야 한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타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무한정 붙잡아두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 위원 한두 명이 가로막는 일이 적지 않았다.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전해 온전히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셋째, 복수 법안소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18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만 법안소위가 2개다. 신속한 법안심사로 법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도록 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방안은 국회 심의와 결정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다.

제20대국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급한 입법과제를 풀어나가는 것만큼 국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 통합 기치로 상생과 협치의 국회 만들 것”

제21대 총선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은 싸우는 국회를 원하지 않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도 공감도 얻지 못했고, 막말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상식과 눈을 맞추라 명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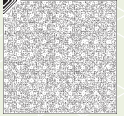
잇따른 선거 패배로 미래통합당은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패배의 쓴맛을 곹씹으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패배의식을 씻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당의 5선 정치인으로서 당이 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사분 오열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당이 어려울 때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비상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은 만큼 책임의 무게를 하루하루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당내외 인사들을 만나 당 수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고견을 듣고 있다. 제21대국회 개원 전까지는 차분하지만 깊이 숙고해 당 수습책과 제21대국회 전략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 소통에 앞장설 것

제21대국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골리앗과 다윗의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177석의 거대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이라고는 하지만, 거대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다수결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자칫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마저 목살될 수도 있는 중대 위기 앞에 선 것과도 같은 형국이다.

의석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여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이든 예산이든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다. 그러나 야당의 충정과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면 국회는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한길을 걷는다면 여당도 결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민 소통에 더 앞장설 생각이다.

제21대국회는 토론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연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회는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여야가 상생과 협치로 국민의 삶을 살뜰하게 챙겼다는 평가를 받도록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원내 지도부로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본인의 특장점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국민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주고,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 시작도 전에 여당에서는 모든 상임위원장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협치가 될 수 없다.

제17대국회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발목을 잡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졸속 심사된 법안이 국민에게 끼칠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회 통과 법률안 중 1년에 10여건은 위헌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리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21대국회가 국민 통합을 기치로 상생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하여

제21대국회의 서막이 열렸다. 이번 제21대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극복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성공적인 방역 대책과 민생안정 대책,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과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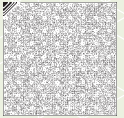
지난 제20대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제20대국회는 국민들에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협치(協治)의 정신이 실종된 국회였다. 이번 제21대국회는 적어도 이런 오명은 벗어버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

우선, ‘365일 일하는 국회’로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제20대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37.8%, 발의 2만4천141건/처리 9천139건).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민생입법 과제의 상당수가 처리되지 못했다. ‘예술인 복지법’, 가수 구하라법(‘민법’) 등 셀 수 없이 많은 입법들이 제20대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국회 일정을 매달 1일, 또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다음 날로 정해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면 많은 법안이 이유 없이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운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법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유로, 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헌·법안 간 충돌의 심사를 위해서라면 국회 내 별도의 기구를 두어 기한 내에 심사를 종료하게 하든다.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1대국회, 코로나 국난 극복의 과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생산과 소비 위축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위축’이 시작되니 고용과 분배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기업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자제해야 한다. 이번 제21대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그린 혁신 뉴딜’과 ‘산업전략의 고도화’와 함께, 고용 위축을 막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논의를 개원 즉시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꼼꼼한 입법과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바로 동이 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호하고, 지역 시장에서 국민의 지갑이 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골목 시장 점포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우선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는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높였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시대가 됐다.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팍스 코리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K-방역’의 밑거름에 놓인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을 새롭게 ‘데이터·네트워크·AI(DNA)’로 무장해서 산업을 혁신·재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역 성공의 전초기지인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이 예고하는 ‘2차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 등으로 신속히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이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제21대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자. 제21대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한 국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제21대국회 개원, 이제부터 시작이다. 🏠

“‘일하는 국회, 일 잘하는 정당’으로 국민 신임 얻을 것”

제21대국회는 제20대국회와는 달라야 한다고 많은 국민께서 말씀하십니다. 언론은 앞다퉈 제20대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0대국회에서 야당도 제대로 못했지만,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가야 하는 집권여당이 친여권을 묶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21대국회 첫 1년, 공룡여당 독주 견제와 미래비전 제시 시험대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우리당의 총선참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즉 국민 공감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여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부족했던 이슈 선점, 아쉬웠던 정책홍보 역시 우리당이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다.

뿐만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512조 원의 슈퍼예산 등 대단히 잘못된 법안과 예산안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



결국, 국민 공감 실패, 그리고 ‘일하는 국회’보다 정쟁에 매몰됐다는 국민 인식이 우리의 패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바르게 세운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을 바탕으로 공룡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재도약함으로써, 2년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낼 것이다.

제21대국회는 177석 공룡여당의 폭주를 얼마만큼 견제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일 잘하는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여당과의 정책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국민 공감 정책 발굴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와의 외연확장에 주력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통해 민심과 정책의 괴리를 최소화할 것이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입법화되도록, 입법지원 시스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대별, 직능별, 지역별 등 타깃형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먼저 살피고, 이슈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건강한 정책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개발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국회가 정쟁을 넘어 활발한 정책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심층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나갈 것이다.

제21대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장기침체 우려에 빠져 있다. 우리 당은 단순히 근시안적인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특히, 제20대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 리쇼어링(reshoring) 관련 법안, 규제완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교두보 마련

제20대국회의 법안통과율이 40%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체 2만 4천141건의 법안 중 9천139건의 법안이 통과됐고, 1만 5천2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처분 됐다. 여당의 비협조로 제20대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국민 부담 경감 법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제21대국회에서 보완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1대국회는 달라야 한다. 불신의 국회, 일 안 하는 국회의 이미지를 벗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일하는 국회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미래통합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김포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난 지 2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당선 감사인사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큰 화제가 됐다. 바로 박상혁 의원이다. 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시민은 “선거 후에도 저렇게 변함없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믿음이 간다”고 했다.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6월, 경기 김포에서 박상혁 의원을 만났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김포 랜드마크 ‘김포아트빌리지’

박상혁 의원은 아침 일찍 한강신도시 고층아파트 옆에 자리한 ‘김포아트빌리지’를 찾았다. 김포아트빌리지는 백제 고대국가의 시원(始原)으로 추측되는 모담산 운양동 자락에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만든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이곳에는 각종 문화예술 체험장과 수준 높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아트센터 전시관, 야외공연장, 전통놀이체험마당 등이 조성돼 있다. 그 밖에도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체험관, 가상현실(VR) 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를 지역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김포는 예로부터 평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끝도 없이 펼쳐진 ‘한강신도시’가 위치한 곳입니다. 신도시 평균 나이가 35세일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요. 반



면, 접경지역으로서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 하성면 ‘애기봉’에서는 북한 황해도 개풍면이 보일 정도로 남북이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모내기나 고구마 캐기 행사가 자주 열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도 하지만 8천여 개의 공장이 있어 뿌리산업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고요. 신도시와 접경지역이 공존하는 흔치 않은 지역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이어 소개한 곳은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한강변 철책길이었다. 육안으로 북한이 보일 만큼 접경지역인 김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박상혁 의원은 “철책 인근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 습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김포시 초입(고촌읍)까지 길게 늘어선 철책이 제거되면 이곳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인근에는 한강 최북단 전류리포구가 있다. 이곳은 민물이 바닷물과 하루에 두 번씩 교차하며 뒤섞이는 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전통시장 마송5일장을 찾았다. 이날은 마침 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선거 끝나도 이렇게 자주 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인사를 건넸다. 박상혁 의원은 2주 남짓 당선 인사를 한 이유에 대해 “앞과 뒤가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구 곳곳을 다녔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정치인들이야 선거 때나 얼굴을 비치지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형식적인 인사가 유권자들에게는 큰 불신을 주고 있구나 생각했지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 들렀다. 호수를 중심으로 정자, 다리, 흔들의자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았다. 호수공원 바로 옆에는 김포 현충탑이 자리

10:00



전류리포구

14:00



마송5일장에서



16:30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한강신도시는 아파트촌 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 마음에 새길 것”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04년 김근태 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2006)을 거쳐 서울시청 정부보좌관(2016),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7) 등을 지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지난 2019년부터는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제17대국회 당시 이인영 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입법부, 행정부, 법조계를 모두 경험한 ‘중량감 있는 초선’으로 불리는 그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크다.

박상혁 의원은 해결해야 할 지역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포 북부지역에는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산업경쟁력을 갖추고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된 곳도 많고요. 이들 뿌리산업체를 재정비하고 지원해 김포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김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김포가 자생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한강신도시에선 어린이, 청소년이 특히 많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려 합니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좋은 정치, 새로운 김포로 보답하겠습니다.” 🍵

김포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김해영 의원

“정치·정책·정당 모두 변하는 ‘삼정혁신’ 통해 당 쇄신에 힘쓸 것”

지난달 국회보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청찬 주자로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을 추천했다. 김성원 의원에게 김해영 의원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상대당과 소통을 잘하는 의원”이라며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년정책 추진과 당 쇄신을 위해서도 힘쓰신다”고 칭찬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김해영 의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의원”이라며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노무현의 향기’가 나는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당 지역구 최연소 의원이자 지역구 전 투표소 승리라는 기록을 가지고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초선의원 시절부터 당 대변인,



김성원 의원

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조직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재·삼선급으로 일해온 김 의원은 최근 제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당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거대 여당과 원 구성, 주요법안 처리, 의사일정 등 치열한 원내협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당의 개혁이다. 특히 정치, 정책, 정당이 모두 변하는 ‘삼정(三政)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만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정치혁신’, 국민의 삶에 들어가 실용적인 정책을 만드는 ‘정책혁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께서 이번 제21대 총선으로 저희 당에 네 번째 회초리를 주셨습니다. 당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죠. 새가 양 날개로 날듯 대한민국이라는 새도 진보와 보수 균형이 맞아야 잘 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수정당이 되도록 당 개혁에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911공약’ 달성 약속

제20대국회에서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성원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는 일명 ‘911공약’ 달성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번 ‘911공약’은 제20대국회에서 의원회관 방 번호가 911호였던 것에 맞춰 91개 일(1)하는 공약이라는 의미”라면서 “단순히 숫자만 맞춘 것이 아니고 지역 시·군의원, 주민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1년 이상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곧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설계라며, 그가 꿈꾸는 지역의 목표도 밝혔다. 그는 연천군을 ‘제3의 호국보훈 도시’로,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중심도시’로 그리고 있다.

“서울, 대전에 이어 연천에 현충원이 들어서게 됐어요. 금심한 반대를 뚫고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확정한 것이 제20대국회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아무런 혜택 없는 접경지가 아닌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3의 호국보훈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황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성원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을 추천했다. 황희 의원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제20대국회 초선, 제21대국회 재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올곧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여당의원임에도 행정부를 향해 날카롭고 균형 있는 질문을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황희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성원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이라며 “전문성과 현장경험은 물론 열정적인 추진력까지 있다”고 칭찬했다.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황희 의원을 응원합니다.”

글. 서기정 사진. 김지범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갈	대	처	럼		흔	들	려	도
대	나	무	처	럼				
단	단	하	게		살	자	.	

“정치에서 다시 한번 ‘우생순’ 보여줄 것”

‘갈대처럼 흔들려도 대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임오경 의원의 인생 좌우명이다.

임오경 의원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핸드볼의 주역으로 이름을 높였다.

1994년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일본 히로시마 이즈미(현 메이플 레즈)에 입단한 임오경 의원은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려놓았고, 2년 만인 1996년 만 25세 나이로 플레이 감독 자리에 올랐다. 감독 취임 첫해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그는 이후 8번이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나라에서 운동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결혼과 출산, 육아까지 감당하다 보니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요. 그럴 때마다 달려간 곳이 히로시마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대나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생존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 향을 맡으며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버텨내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플레이팅 감독으로 한창 활동 중이던 2000년 임오경 의원은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다.

“더 이상 운동하기 어려운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팀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에서 임신 중에는 감독만 하고 출산 후 복귀하라며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6개월 중반까지 코트에서 뛰었고 그 후에는 감독으로 코트를 지켰습니다. 출산 이틀 전 결승전 경기가 있었는데 13초 남겨놓고 역전골을 넣어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주 정도 쉬고는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다니며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던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이 대나무 숲이었고, 그런 시간을 견디며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목소리 경청해 최고의 의정활동의 답 만들어낼 것”

2008년 귀국한 임오경 의원은 여성 최초로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창단 감독으로 부임했다. 8년 만인 지난 2016년에는 팀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유리천장을 깨고 우승을 이뤄낸 여성 감독이 됐다. 2009년부터는 학업도 병행해 2014년 한국체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고등학교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을 반드시 가겠다,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던 것이죠.”

영화 ‘우생순’이 크게 성공을 거둔 이후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았던 그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다. 공부를 하던 중이기도 했고 스스로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체육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면서 많은 단체가 감사를 받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잘해온 사람들까지 같이 별받는 느낌이 들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촛불시위에 나가 정치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때 또다시 연락을 받았고 입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중립적인 자세로 강단 있게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운동선수로 뛰면서, 또 감독으로 후배를 양성하면서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직장인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여자선수들은 결혼은 어찌어찌한다 해도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많이 경청해서 가장 좋은 의정활동의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임오경 의원이 정치에서 보여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대해본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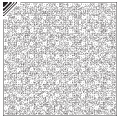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정신으로 ‘국민 통합’의 길 가겠다”

윤주경 의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 1번으로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 여성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 의원은 독립운동 연구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주경 의원은 “어린 시절부터 어딜 가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집에서 늘 할아버지(윤봉길 의사)의 이름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서 “윤 의사의 장손녀라는 것은 제게 큰 혜택이면서 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가난했다. 윤주경 의원은 “학교에서 공납금을 면제받으려면 증명서를



때야 하는데 그때 공급금 못 낸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의도치 않게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드러나곤 했다”고 말했다.

윤주경 의원의 할머니(고 배용순 여사)는 남편 윤봉길 의사와 20대 초에 생이별을 해야 했다. 윤 의사가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안아봤던 아들은 당시 세 살이였다고 한다. 윤 의원은 “할아버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윤 의사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 아니냐. 뭘 그리 대단한 행사를 하느냐’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할머니께서 상심하시는 것을 보았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왜 중요한지 느낄 때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봉길 의사는 아내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지만, 윤주경 의원의 부친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열 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숨졌다. 할머니는 후에 아들이 6녀 1남을 두었을 때 “손자든 손녀든 귀하게 기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윤주경 의원은 6녀 1남 가운데 맏딸이다.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윤주경 의원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번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매번 윤봉길 월진회 이사 등을 맡으며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에 참여했고 독립기념관 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이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지난 2014년 9월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

독립기념관장 시절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윤주경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시절,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을 편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15년 4월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편찬

위원회를 출범시켜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정말 부족하다”며 “이들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4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파리에 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프랑스 교수로부터 일본학을 전공하면 (일본 측에서) 지원금과 학술자료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취업할 길까지 알아봐준다는 거예요.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면 뭘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게 놀랐어요. 일본은 저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뭘 했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7년 독립기념관장직에서 퇴임한 후 독립운동 연구 분야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던 중 미래한국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윤주경 의원은 제21대국회에서 독립운동 분야 연구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갖추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으로 독립운동 연구기관 내실화와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독립운동에는 좌우가 없었다”며 “국회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필요한 일에는 한 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통합’의 길을 걸었던 만큼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일시	주최자	토론회명
5. 8	노웅래 의원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정책토론회
5. 12	김한정·성일종 의원	‘기후·재난 비상 대응’ 토론회
5. 13	이원욱·김병욱 의원, 기획재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토론회
5. 15	유승희 의원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5.20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 원 모임,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 세미나
5. 21	심상정 의원,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정책토론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 휴양·치유관광 산업을 소개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웅래 의원은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으로 여가시간 활용과 휴양문화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휴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정책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휴양·치유관광 산업 활성화를



● ‘기후·재난 비상 대응’ 토론회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고려대 의대 특임교수는 “휴양·치유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치유자원, 해양치유자원 및 기후·광물·온천 등 치유자원을 활용한 포괄적 치유행위를 말한다”며 “국내에서는 산림치유를 시작으로 해양치유, 농업치유, 기후치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휴양·치유 산업을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과 연계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서비스, 바이오 산업과도 연계해 글로벌 헬스케어 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구옥 영산대 총장은 “휴양·치유 산업은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력이 큰 선진국형 산업으로, 산업 규모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합적 조직 구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은 5월 12일 ‘기후·재난 비상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비롯해 기후·재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전환 투자를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후위기와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기후위기는 한번 선을 넘으면 돌아오기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은 에너지전환이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문명의 전환기가 왔다고 주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중심’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토론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의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료는 건강한 도시에 녹아들어야 한다. 의료체계 강화만이 아닌 사람 중심 철학을 가진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재난의 계층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권위가 기관에서 데이터로 이전됐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철학을 만들고, 혼자가 아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 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5월 13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산업(언택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스마트폰, 스마트 팩토리,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이 모두 언택트 산업인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산업 진행 속도를 훨씬 빠르게, 범위를 넓게 할 것이라는 데 이의는 없는 것 같다”면서 “정책적 지원, 재정·행정 지원, 규제완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언택트 산업과 관련해 원격의료의 본격적 확산을 전망했다. 그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원격진료는 중국에서부터 확산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원격진료기술과 온라인 의료컨설팅 기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1분 무인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AI의사의 진단을 기반으로 원격진료의사가 추가질문을 통해 처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촉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행로봇 및 자율주행차 도입, OTT시장(Over The Top, 인터넷으로 미디어



●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언택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추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혁신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 내용을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법은 포용사회”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조세지출’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소장은 잘못된 경로의존적 기금지출, 재정 칸막이 문제, 지방정부 잉여자금 등을 지적했다.

●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 세미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 의원)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5월 20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015년 시작된 웰다잉(well-dying, 존엄한 죽음)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이끌었다. 원혜영 의원은 "다가오는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과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21대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의 제정에도 사전준비 및 교육이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여전히 어려운 현상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일학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만 (제도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모두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14곳 중 146곳(46.5%)만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천489곳 중 14곳(0.9%), 요양병원은 1천577곳 중 54곳(3.4%)에 그쳤다.

박혜윤 서울대병원 교수는 "현장에서 법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은 물론 의사결정 도구도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권한이 없다 보니 무연고자 등은 관리할 수 없어 아쉽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5월 21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사실상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정규직 및 임시직,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특수고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소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제21대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입법 중 하나”라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미루면 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임금이 아닌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설계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보험료 납부기준을 소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소득 기준’을 만들거나 ‘포인트 적립’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최소소득 기준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인 총소득액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인트 적립의 경우 개인 총소득을 누적해 특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홍 실장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능력”이라면서 “다행히 국세청의 소득과 악 역량이 높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주 자리에 국가가 대신 들어가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병원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조세방식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가야 이행의 안전성과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리. 서기정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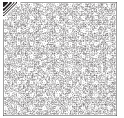
국회는 5월 20일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부마 민주항쟁 등을 재조사하는 과거사 관련 법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 이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n번방 후속 입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입법 등 총 1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월 29일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6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법률명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법률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

개정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사이버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법률은 미성년자 의제강간(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

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포털,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인터넷 포털 등)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포털 등에서 성범죄에 의한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 3건 성립됐다. 또 현행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설치로 인한 침해사고 및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이 없어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현행법상 시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했다. 또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해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권고하며, 침해사고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확보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해 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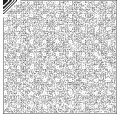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인증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전자서명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법률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전자서명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동등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차이니즈 월’의 본뜻은 만리장성이나 최근 기업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나 장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정보교류 차단의무만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해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제한 요건을 완화해 규정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개정법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

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을 발행해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의 대출·자산의 매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출자(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원외, 기획재정부 소관)

개정법률은 2020 과세 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 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법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며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내수기반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현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그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가구 수’에서 ‘세대 수’로 변경했다. 법 개정으로 공립 유치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특별법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

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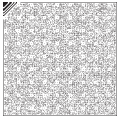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과 ‘모집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해 발행·유통해오고 있는 가운데, 법



적 근거 부재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거나 상품권을 지방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등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시행상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가맹점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불법으로 환전되거나 판매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가 확립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지방공무원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

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가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소관)

최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를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어린이 통학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동승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며,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승합차량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이 법률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강화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업무협약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거부 시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문화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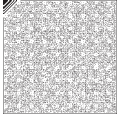
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정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지원하며, 문화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게 하는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소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풍납토성’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제



정으로 풍납토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 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소관)

이 법률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제정법안들을 통합해 역사문화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간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조치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을 연구·조명하고, 아울러 역사문화권 지역 주민에게 활력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영농·영어 의무

를 부여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 60.3%, 40세 이하 농가 비율이 0.75%인 농어촌에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함에 따라 공익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은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신설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어촌에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 일자리에 주로 종사해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지원수준도 낮아 저소득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도 아닌 저소득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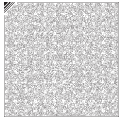
개정법률은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시범도시 등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진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범위에 종전 기반시설 외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 등을 추가해 스마



트도시건설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에 민간 위원장을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조화를 도모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기반시설 외 필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원장의 위촉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도시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요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발주청의 부당한 개입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육·훈련 기관의 퇴출 제도 미비로 교육의 질에 한계가 있었고 공급자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개정법률은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은 소규모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

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 및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어린이를 탑승대상으로 하는 차량의 안전 제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법률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운행정보<차량속도, 브레이크 신호, 위치추적, 충격감지 등>를 저장하는 장치로 동 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의 분석을 통해 과속, 급출발, 급감속, 앞지르기 등의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교통행정기관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가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해 사고유발 가능성을 파악하고 교통체계의 개선 등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정법률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 관리 전담 주체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기관신설이 아닌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고려,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문을 수정·의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4월 29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5월 20일 통과한 개정법률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전 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는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

는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해 해당 범죄가 ‘음란물’ 범죄가 아닌 ‘성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행위를 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광고·소개행위를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당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사랑상품권의 전국적 유통 질서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지난 4월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정 이전에도 조례에 근거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해왔으며, 정부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 사업을 편성한 이래 매년 해당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정상적인 거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시세차익을 얻는 소위 ‘상품권 깡’과 같은 편법행위 등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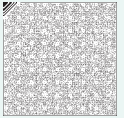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관련 논의 경과

지난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측되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2천400억 원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발행 확대 시 상품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유통 등을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4월 경기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신규 편성됐고, 지원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탄력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주요내용 및 의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추혜선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 김영우 의원안, 그리고 이진복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흥업소 또는 백화점 등지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역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경우 가맹점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기에(지방자치법 제22조), 시세차익을 노리고 상품권을 환전하는 자에 대해 침익적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셋째, 근로기준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및 보수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지역사랑상품

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강원도가 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제정법은 사실상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서 사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할인혜택 부여 시 개인별 구매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상품권을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불법환전 또는 재판매의 유인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정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상품권의 전국적 유통질서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에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도 지급되는 만큼, 제정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반려견 안전관리로 막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9. 3. 21. 시행)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개물림 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총 6천883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6번 개물림 사고가 난다는 셈이다. 지난해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 또한 의무화됐다. 다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보완점을 알아본다.

위험적인 맹견, 입마개는 필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 모(45) 씨는 “요즘 잦은 개물림 사고 때문인지,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을 하지 않

은 강아지를 보면 식은땀이 난다”면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사고가 나면 서로 힘들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반려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 2018년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이제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맹견 훈련법, 동물보호법령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또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일본의 국가공무원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과 그 함의



최은규 일본주재관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내각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중의원에 제출됐다.

일본은 1947년 국가공무원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공무원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정년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이후 신분보장 확보 등을 위한 공무원 정년제에 관한 검토가 이어져오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제를 도입, 1985년 3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근로의욕과 능력을 갖춘 고령자의 고용이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자¹⁾ 공무원의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일본 정부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고, 2013년 4월부터는 기업으로 하여금 희망하는 노동자 전원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2월에는 동법을 개정, 근로자가 70세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고용의무노력 규정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금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이미 법 개정을 통해 55세였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로 늦춰졌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중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65세로 늦춰졌다.²⁾ 이처럼 민간의 고용연령이 늘어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늦춰지면서 공무원 정년

1) 일본의 고령률(65세 이상 인구)은 1980년 9.1%에서 2018년 28.1%로 증가한 반면, 생물(인구 1천 명당 출생자율)은 1980년 13.6명에서 2018년 7.4명으로 감소했다.

2) 2013년까지 65세로 늦춰진 부분은 정액부분이며, 보수비례부분은 2013년부터 3년에 1세씩 늦춰 2025년에 65세로 된다. 또한 2020년 5월 현재 현행 65세인 고용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과 민간 정년의 격차발생에 따른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퇴직 공무원에게 공적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5년의 무수입 기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재임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³⁾ 이는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며 공무원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의 사회보장 부담을 덜고 민간의 정년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연금수급자가 정년연장 기간 동안 연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계속 검토해왔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올해 3월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사유를 보면, 인사원이 내각에 제출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2018. 8. 10.)”을 기초로 해,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직 근무 상한 연령에 따른 강임과 전임 및 정년 전 재임용 단시간 근무 제도를 마련하는 외에, 연령 60세를 초과하는 직원과 관련된 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

계적으로 2022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0년까지 65세까지 늘리도록 하되, 급여는 정년 당시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직의 정채현상을 막기 위한 직책정년제 도입, 고령기의 다양한 직업생활설계에 대한 지원(단시간 근무 제도 등) 등도 담고 있다.

한국은 국가공무원제도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및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등 사회·경제상황이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등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국민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2018년 인사원의 의견신청을 거쳐 2019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우대정책이라는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당시 참의원 선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올해에 다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⁴⁾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인력부족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재임용제도는 국가공무원의 정년퇴직자 등에 대해 종전의 근무실적 등에 기초한 전형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정해 상시근무 또는 단시간 근무 관직에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검찰의 정년연장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 및 여론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함께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성적 촬영물 등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0년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0년 4월 29일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NEWS

5/8 문희상 국회의장,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 주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8일 사랑채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의회외교포럼)에 참석해 “의회 외교포럼이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성과가) 제21대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제21대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면서 “제21대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 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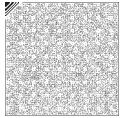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금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해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5/11 “의회외교활동자문위, ‘의원외교’ 정립에 이바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1일 국회 사랑채에서 의회외교 활동자문위원회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교에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반성권대 의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



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제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의원 해외 활동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의장 직속 위원회로 발족했다. 오찬간담회에는 운영관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호·신상훈·이병길·최성주·홍현익·박홍규 위원 등이 참석했다.

5/15 “마무리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 제21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 “제20대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은 제21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 정도는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실시가 됐다”면서 “(국



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직 시행되지 못한 자문의견을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NEWS

5/15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에 앞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차담회 이후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히고 있다.

5/19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려서부터 직접 보이스카우트



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스카우트에 가입시킬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휴머니즘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영원히 빛나길 기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96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년간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임원,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초대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달성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금장을 받게 됐다.

수여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원기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연맹장, 김현재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임원,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윤철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5/19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 시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9일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의 작품이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 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 원을 시상했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 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했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mm에서 70mm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공식 관인을 새로운 관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5/21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1일 제20대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몸은 떠나도 문희상의 꿈, ‘팩스 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할 것”이라며 “저의 정치는 ‘팩스 코리아나’로부터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팩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당찬 포부였다”고 밝혔다.

또한,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자신을 정치로 이끌었다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지난 정치생활을 회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현실이 됐고 이로

NEWS

써 저의 목표는 모두 다 이뤄졌다”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했는데, 덤치고는 너무 후한 정치인생을 걸어왔다. 무려 다섯 정부에서 제게 역할이 주어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어서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부연했다. 정치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서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나날이었다. 깊은 회한이 밀려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오늘 이렇게 명예퇴직하기까지 은혜와 고마움을 어찌 잊겠느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제가 나고 자라서 뼈를 묻을 고향 의정부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조 6천억 원 대비 4조 6천억 원이 증액된 12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

서, 추가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 4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국회,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 발간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5월 15일 국회에 식재된 주요 나무와 풀꽃의 사연을 담은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총 140종·18만 9천여

그루의 나무와 풀꽃 가운데, 유사한 나무와 풀은 원래의 수종에 통합해 총 125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식물학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역사·문화적인 내용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어떤 나무가 국회 안 어디에 자라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회 경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세한 나무 지도까지 그려 넣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숲해설 프로그램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바란다”며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나무의 지혜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memorial.assembly.go.kr) 등에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열린국회정보’에서는 ‘보고서·발간물’ 메뉴를 선택한 후, ‘국회사무처’ 코너를 클릭하면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 전자책을 읽어볼 수 있다.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소통마당’ 메뉴를 선택해 열람할 수 있다.

8급 공채시험 필기시험 코로나19 대비 안전대책 마련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6월 6일로 연기됐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5월 19일 관련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공지했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 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해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할 계획이다.

셋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에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해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화·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도시생태 복원 추진을 위한 채밀 행사 열어

국회사무처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NEWS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키울 계획이다. 이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

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

5월 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 행사가 진행됐다. 당초 일반 시민과 국회 직원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원 근로자 등에게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뽑은 제20대국회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이 제20대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혔다. 국회사무처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5천880명, 전문가 82명이 참여했다. 국회 차원에서 지난 4년 동안 처리된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국민들이 어떤 입법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본 첫 시도다.

우선, ‘정치행정분야’에서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분야별 1인 2표<복수 선택>로 백분율 합계는 200%). 1위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를 촉발한 불체포 특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은 가슴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제조물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단축법(34.5%)을 비롯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제20대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뤄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바람도 댓글로 전했다.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소통관 야외 카페 오픈



카페 ‘HERITAGE 1919’가 국회소통관 야외에 5월 25일부터 문을 열었다. 이 카페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

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 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독립유공

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 김원웅 광복회장,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방통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3월 뉴미디어부문)’상을 수상했다.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유익한 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 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7~8건의 법안을 소개하고, 특히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골라 집중분석하며 MC 박지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네 명의 법조인과 기자들이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통

NEWS



과 시 미치게 될 변화까지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재미와 정보를 모두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국장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으로 국회방송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개국 16년을 맞은 국회방송은 스카이라이프 162번, KT olleh tv 65번, LG U+tv 172번, SK Btv 291번과 전국 케이블TV에서 시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국회도서관,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159쪽)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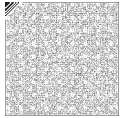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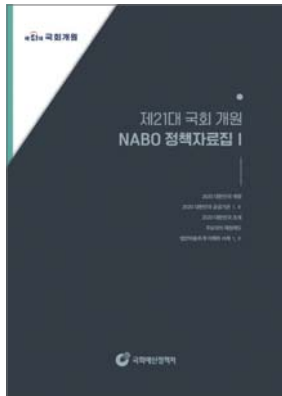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勞動觀)의 변화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이 현대사





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가재정체계와 재정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은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NABO 정책자료집'은 총 19권으로 구성된다.

6월 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묶음에는 국가재정, 조세,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과 각종 통계를 담은 '재정체계 안내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재정제도를 소개한 '주요국의 재정제도', 국회예산정책처 고유 업무인 비용추계의 각종 사례를 소개한 '법안비용추계의 이해와 사례' 등이 포함된다. 6월 중순에 발간되는 두 번째 묶음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시리즈로 '총론', '산업무역구조변화 대응전략',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기후변화 대응전략', '경제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등 총 5권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한국경제의 주요 지표와 전망을 소개하는 '경제지표로 보는 제20대국회', '제

21대국회와 한국경제 전망'과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 및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재정전망' 시리즈가 계속해서 발간될 예정이다.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가 5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21대국회 개원 관련 국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하중 처장은 스미스 대사가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자리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대사는 조사처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영국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은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NEWS

관련 분석을 진행한 바 있는지”를 문의했다.

김하중 처장은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발간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전달했고, 한국 의료체계의 높은 효율성·반응성, 방역과정에서 공개성·투명성·민주주의 등이 성공적 대처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에 있어 환경 친화적인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 스미스 대사는 제21대국회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에 협력을 요청했고, 김하중 처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국회미래연구원의 2주년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미래연구원이 성장을 거듭해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의화,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특별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정우택 전 국회운영위원장, 박홍근, 김선동, 권은희 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와 박형



준, 김교홍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조동성 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인천대학교 총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박진 미래연구원장이 원혜영, 김세연, 이원욱, 정양석, 이혜훈 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부 순서인 성과공유회에서 박진 원장은 미래연구원 개원 후 2년간의 주요 성과를 직접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미래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 국경복 전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전 입법조사처장, 이인용 전 국회사무차장,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 김선욱 미래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을 기념했다.



제21대국회 개원

제21대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안고 출범한 제21대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춤추다 보니 4년이 갔어요



윤호숙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자동차들은 쉿쉿 달리고 매연과 딱딱한 아스팔트가 우리를 맞이한다. 선거유세는 봄날의 꽃놀이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단 춤으로, 몸으로, 울동으로 맨땅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똑같은 모양의 옷차림을 한 우리들이 길거리에서 울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 재들이 춤을 추는 걸 보니 잠시 후 선거유세를 시작하려나 보다. 에라 시끄럽겠다. 빨리 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행인들이 걸눈길로 흘려보든 말든, 일단 한번 시작한 울동은 힘차게 계속해야 한다.

나는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때 경남도당에 파견된 이후로 올해 4월 까지 해마다 한 번꼴로 경상남도 선거판에서 일하는 행운(?)을 가졌다. 2018년 경남 도지사 선거, 2019년 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0년 경남 창원시진해구 선거. 전남 무안 땅에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난 내가 무슨 인연으로 해마다 경상도 땅에서 선거유세를 하느라 휘젓고 다녔는지 이상한 인연이기도 하다.



선거는 단판에 승부를 가르는 것이므로 언제나 깊고 진득한 여운을 남겨주었다. 선거유세 현장은 어정쩡하거나 머뭇머뭇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 같은 율동 하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이 깃들지 않으면 선거유세의 온도를 전혀 끌어 올려주지 못한다. 율동뿐만이 아니라 선거사무실의 팀워크가 결국에는 승패를 가른다는 경험을 가슴 깊이 갖게 됐다. 같은 사무실에 모인 이상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인물들이라도 한 덩어리로 녹아 함께 전진하는 태세가 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민심이 어디선가 끌려온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때로는 가슴 뛰기도 하고 무서운 현실의 긴장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나의 춤바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8년 8월 ‘맘마미아2’ 영화를 관람하면서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달 평소 알고 지내던 국회 지인들에게 댄스동아리 이야기를 했고, 단번에 20명이 모여서 댄스동아리를 결성했다. 지금까지도 매주 화, 목요일 저녁이면 뜨거운 춤판을 벌이고 있으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줌마가 춤바람 하나는 제대로 났나 보다.

덕유산 촌 여자가 국회 비서로

4년 전인 2016년 6월 뜻밖의 초대로 서형수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생활을 시작했다. 서형수 의원은 내가 한겨레신문사에 근무할 때 상사로 모셨던, 충기가 비범한 인물이었다. 중국에서 9년이나 떠돌다가 덕유산 산기슭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던 나를 비서로 불러주셨으니, 은인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경남 양산을 지역구로 둔 조선의원계서 왜 하필이면 전라도 여자를 비서로 부르셨는지 감히 따질 일은 못 되지만 두고두고 수수께끼 같은 부름이었다. 그동안 모셨던 서형수 의원은 국회를 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가셨고, 나는 국회에서 일자리를 못 잡았으니 이제 출판에서도 떠날 때가 다가오는가 싶다.

아쉬움이 남고 무언가 목젢에 걸리는 것이 많기도 하다.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자리가 너무 이론적이고 글과 말에 치우쳐서 날을 세우는 현상이 지나친 듯하다. 정책은 당연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충실히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현실은 굽이치는 파도처럼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거리의 대중 속에서, 그 땀 냄새 속에서 정치의 갈 길을 느낌으로 알아내려는 노력도 매우 귀중하다.

나는 국회에서 여성 동지들과 많은 수다를 떨었다. 대한민국 국회 보좌진이라는 좁은 세계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다. 지연과 학벌의 벽도 높다. 준수한 논리, 재빠른 대책 등에서 아직은 여성들이 뒤처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과감한 실험적 발탁과 새로운 발굴 노력이 국회를 색다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남녀노소 보좌진 누구나 국회의 귀중한 자원들이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어서 많은 감화를 받았다.

나의 보좌진 생활은 나름대로 화려(?)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달고 다녔으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 아닌 속담이 나를 위해 생긴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하루 저녁에 생긴 댄스동아리는 아직도 회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으니 벼슬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버리면 나처럼 되는 모양이다. 그동안 이곳저곳 어슬렁거리며 먹을 것 뺏어 먹고 수다를 늘어놓고 다닌 나에게, 사람대접 잘해준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정치는 함께 춤추는 것이다. 기러기가 떼 지어 날다 보면 까마득한 창공을 단숨에 건너가듯이...” 🍵

경제학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독감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인류가 그걸 알게 된 건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가 전 세계를 자유자재로 여행하고 다닐 만큼 과학이 발달했던 17세기 무렵에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한 오리나 개의 혈액을 사람에게 수혈하는 치료법이 유행할 만큼 의학은 미개했다.

지금부터 100년쯤 전에는 헝가리 출신의 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다가 미친 의사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당시의 의사들은 불결한 시체를 만진 후에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감염시키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그 의술이 인류가 갖고 있는 최선의 첨단 의학이었다.

사람들에게 꽤 냉철하고 세련된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제학의 수준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다.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1930년대 미국의 중앙은행은 대공황을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맞서 싸우다가 경기를 장렬하게 침체시키기도 했다.

이런 엉뚱한 정책의 사례는 20세기 말 한국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유는 만기가 짧은 단기외채가 많았기 때문

인데 돌이켜 보면 그 무렵 갑자기 국제 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외채의 만기 연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치명적인 원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돈을 빌려올 때 3년이나 5년 단위로 만기를 길게 해서 빌려왔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돈을 갚아야 할 만기일도 자주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한 달 씩 빌리고 다시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는 돌려막기를 매달 해오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만기는 돌아왔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의 금융감독정책은 이상하게도 만기가 긴 외채를 빌려오는 걸 오히려 규제하고 단기외채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왜 위험이 큰 단기외채를 더 권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당시에는 엉뚱하게도 ‘외채는 나쁜 것이니 가능하면 빨리 갚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장기 외채를 오히려 줄이라는 규제를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칠만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경제학을 꽤 오랫동안 다져진 안정된 학문체계를 갖고 있는 분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어떻게 해야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최선



의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경기가 나쁜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의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얼른 망하고 새 기업이 등장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불경기에 대처하는 지금까지의 이론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물건의 품질이 좋고 나쁘고 간에 사람들은 쓸 만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과거보다 주저하고 지갑을 닫게 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게 경기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일단 시중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갑자기 부도나는 회사는 줄이고 불경기에서 일단 벗어나는 쪽으로 처방의 방향을 바꿨다.

‘마음대로 돈 찍어쓰기’ 정책의 단점

그러나 그것도 문제는 많았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은행은 그렇게 낮아진 금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빌려주지는 않는다. 경기가 여전히 나쁘니 빌려준 돈을 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우량한 계층에게만 저금리 대출의 혜택이 가고 이들은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산 가격 상승을 즐기게 됐다. 경기는 나쁘는데 자산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유다.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기업으로까지 돈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정부가 그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빌려

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이 샘솟는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게 공짜로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도 잘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 꽂아준 돈이 기업으로 흘러간 후 그 돈은 다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순환되지 않고 계속 어딘가에 쌓이고 정체된다는 뜻인데 그건 ‘돈 버는 능력의 양극화’ 때문이다. 3명이 사는 마을에서 A는 노래를 하고 B는 마사지를 하고 C는 빨래를 한다면 그 마을의 경제는 A의 노래 실력과 B의 마사지 실력, C의 빨래하는 기술이 거의 비슷해야 잘 돌아간다. A가 노래를 불러서 번 돈으로 B에게 마사지를 받고 C에게 빨래를 맡긴 후 다음날 다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들으러 B와 C가 또 와야 한다. A의 노래는 환상적이지만 B와 C의 마사지와 빨래 기술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 마을의 돈은 A의 주머니에 쌓인 후 돌지 않는다. B와 C에게 매일 정부가 돈을 쥐박아 A의 주머니에만 더 쌓이고 역시 돌지 않는다. 심지어 A의 돈을 강탈해서 B와 C에게 나눠줘도 결국은 다시 A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와 쌓인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경제학은 아직 찾지 못했다. B가 마사지를 더 잘하고 C가 빨래를 더 잘하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경제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숙제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빌려 쓰는 청년들이 모여 짓는 집, 달팽이집



이정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운영지원팀

1978년 한 일간신문에 칼럼이 실렸다.

“새 학기가 되면서 3만 5천 원이던 하숙비가 4만 원으로 올랐다.”

당시에 5천 원이 오른 주거비 4만 원은 대학생에게 매우 큰돈이었다. 약 40년 전 서울에서 하숙을 했던 ‘그때의 당사자’는 매달 5천 원을 더 내거나, 다른 하숙을 찾아야 했다. 올라가는 임대료는 청년만 부담해야 하는 몫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주거비 상승곡선은 여전히 가파르고 ‘그때의 당사자’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다수의 청년은 지금도 집을 빌려 쓰고 있어 집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민달팽이 세대’가 낫설지 않다. 높은 임대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환경과 1인가구로 대표되는 고립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주거비 상승곡선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거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 문제 해결 위해 세상에 대안을 던진 민달팽이

이러한 현실 속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고자 뭉쳤다. 주거 취약 계층이 된 청년들이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고자 모인 조직이 ‘민달팽이유니온’이다. 청년이 시민으로서 주거권을 외치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문제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직접 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시작됐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의 주거정책을 다루고 세입자 권리보호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한다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사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빌려 쓰는 청년들이 모여 제시한 대안은 이렇다. 첫째, 거주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을 빌리거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달팽이 집을 7호까지 공급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7개의 주택을 빌릴 수 있었을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7호까지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2015년 청년주거기금 마련을 위한 달팽이펀드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약 110 곳의 개인 및 조직이 모은 돈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었고, 이 사례는 후에 공급한 주택의 사회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포스코, 서대문구, 세종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을 시작하게 됐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아직 토지나 주택을 매입할 만큼 자본이 여유롭지 않기에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달팽이 세대가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립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지출(월 임대료, 보증금 대출로 인한 월이자, 관리비용 등)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액수가 매우 많다. 그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1인가구인 청년이 주변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한 월임대료로 달팽이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주거 아이디어를 주택에 직접 담는 사회주택의 청년 건축주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돼야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푸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기업이나 공공의 자본을 활용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은 단순히 정책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거 공간이나 커뮤니티실 등 건축 과정에 청년의 아이디어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집은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영리 주거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

냉동 인간이 가능해지려면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 인간’이 나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냉동 인간이라고 하면 SF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로, 당장은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가 수백 년 걸리는 우주여행을 떠난다는 등의 이유로 사람을 얼렸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녹여서 소생시키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내 최초 냉동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사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8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의 아들은 러시아의 크리오러스(KrioRus)라는 냉동 인간 기업에 의뢰해 노모의 시신을 냉동 보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미래에 암을 정복하고 해동 기술이 발전한다면, 잠시나마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크리오러스는 200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죽은 사람과 동물의 몸을 액체 질소로 냉동해 보존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냉동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직후에 보존 처리를 한 뒤 냉동한다. 때로는 몸 전체가 아닌 머리만 냉동하기도 한다. 저온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시신은 오랫동안 썩지 않은 채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얼음이 시신의 세포를 파괴해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현재의 냉동 인간은 미래에 언시신을 해동해 죽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만약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냉동 상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머리만 냉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계 몸을 만들어 머리에 붙이거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수준의 기술까지 개발되어야 냉동 보존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설령 사람이 죽기 전에 냉동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냉동할 때 몸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사람을 얼리면 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얼면서 얼음 입자가 생기는데, 이 입자가 날카로워 세포막에 손상을 입힌다. 동상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한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손이나 발이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얼음 입자 때문에 세포막이 파괴되어 조직이 괴사하는 것이다. 심하면 동상 부위를 잘라내야 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냉동 인간을 만들 때는 보존 처리를 한다. 혈액을 빼내고 보존액을 넣은 뒤 냉동해 가능한 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몸에는



혈액 외에도 액체가 많기 때문에 현재 냉동되어 있는 시신의 세포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SF에 나오는 것처럼 냉동 인간이 가능해지려면 냉동할 때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기술, 혹은 해동할 때 세포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 냉동은 이식 환자에게 큰 도움 될 것

몸 전체를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몸의 일부만 냉동해 보관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정자와 난자다. 나중에 아이를 낳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일은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인 난자의 경우 내부의 수분을 동결보존제로 교환한 뒤에 액체 질소를 사용해 냉동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론 수정란을 냉동하기도 한다.

장기를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건 아직 어렵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의 장기가 몸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가 근처에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장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때 장기 냉동과 해동이 가능하다면 멀리 떨어진 환자에게도 적절한 장기를 이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피부 등 얼렸다가 손상 없이 녹이는 데 성공

사람의 장기처럼 크기가 있는 경우에는 얼렸다가 녹일 때 결과 속의 온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전자 레인지처럼 속까지 함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 2017년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사람의 피부, 돼지 혈관과 심장 판막을 얼렸다가 손상 없이 녹이는 데 성공했다. 동결보존제에 섞은 산화철 나노 입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얼린 조직을 녹일 때 자기장을 가했다. 그러면 내부의 산화철 입자가 빠르게 돌면서 열을 낸다. 결과 속의 온도를 함께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2016년에는 토끼의 뇌를 냉동했다가 5년 뒤에 별 손상 없이 해동하는 데 성공한 연구도 있었다. 뇌 속의 혈액을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한 뒤에 얼렸다가 다시 녹인 것이다. 연구진은 해동한 뇌의 조직을 관찰한 결과 별다른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비록 조금씩이지만, 몸을 얼렸다가 다시 녹이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언젠가는 몸 전체를 얼렸다가 소생시키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죽음을 앞두고 냉동 인간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이다.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100여 년 만의 귀향과 해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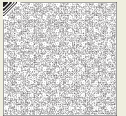
국보 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070~1085년. 경복궁 야외에 있을 때의 모습이고 2016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보존처리 중이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법천사(法泉寺) 절터가 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 때인 8세기 초 법고사(法阜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됐으나 후에 법천사로 바뀌었고 조선시대 언젠가 절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쓸쓸한 절터엔 고려시대의 승려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70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광국사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법천사에 승탑과 기념비를 세웠다. 국보 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1070~1085년)과 국보 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1085년)다. 지광국사탑은 지광국사의 사리를 모신 승탑(부도)이고 탑비는 그의 공적을 기록한 비이다. 그런데 지금 법천사터엔 지광국사탑비만 서 있고 지광국사탑은 보이지 않는다. 원래 한 쌍이었던 두 문화재가 짝을 잃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지광국사탑이 법천사터에 없는 사연

사연은 이렇다. 1911년 가을, 한 일본인(A)이 법천사터에 있던 지광국사탑을 한 주민에게서



사들였다. A가 주민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하지만 사찰의 승탑을 개인이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사찰의 승탑을 개인 주민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못된 일본인이 주민을 속여 훔쳐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1911년 A는 곧바로 서울에 사는 일본인 부호(B)에게 지광국사탑을 팔았다. B는 서울 명동의 한 병원으로 승탑을 옮긴 뒤 1912년 자신의 집 정원으로 다시 옮겼다. 이어 B는 일본 오사카의 또 다른 일본인(C)에게 팔아넘겼고 C는 같은 해 이 탑을 일본 오사카로 반출했다.

소식을 접한 조선총독부는 “지광국사탑은 국유지 안에 있는 것이니 반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1915년경 B는 오사카로 건너가 C로부터 지광국사탑을 다시 사들인 뒤 총독부에 헌납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저들이 사고팔고, 돌려받고, 한 것이다. 모두 불법 약탈이다.

천만다행으로 지광국사탑은 돌아왔으나, 이 탑이 자리 잡은 곳은 원래 장소가 아니라 서울의 경복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여러 전각을 파괴하고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지광국사탑을 경복궁 행사장에 장식용으로 세워놓았다. 지광국사탑은 그렇게 경복궁에 자리 잡게 되었다. 원주엔 지광국사탑비만 홀로 남아 빈터를 지켜야 했다. 식민지의 아픔이었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지광국사탑은 또 다른 수난을 겪어야 했다. 6·25 전쟁 때 폭격을 당한 것이다. 몸체 일

부만 남고 상륜부와 옥개석(지붕돌)이 박살이 났다. 1957년 시멘트를 이용해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고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작업이 이뤄졌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아온 국보 101호 지광국사탑은 경복궁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 탑을 잘 들여다보면 조각조각 붙여놓은 자국이 의외로 많다. 시멘트로 채워 넣은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이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국보 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 승탑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일신라 때까지의 승탑이 대부분 8각 평면을 기본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지광국사탑은 4각 평면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이 특히 새롭다.

지광국사탑은 전체적으로 조형미가 탁월하다. 자유분방하고 화려하지만 어지럽거나 경박하지 않다. 돌을 다루는 기술과 표현 기법도 뛰어나다. 특히 표현에서 참신한 발상이 두드러진다. 바닥돌을 보면, 네 귀퉁이마다 용의 발톱인 양 멋진 조각을 가미했다. 이 덕분에 육중한 승탑은 구조적으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구현해냈다. 탑신을 보면, 앞뒤로 문짝을 본떠 새겼다. 사리를 모시는 곳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다른 승탑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면모다. 이러한 면모는 짝을 이룬 국보 59호 지광국사탑비에서도 나타난다. 이 비에서는 왕관 모양의 머릿돌이 인상적이다. 이런 모습은 이전의 비석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국보 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1085년

모습이다.

국보 59호 지광국사탑비는 1085년에 세워졌다. 이로 미루어 지광국사탑은 지광국사가 입적한 1070년부터 1085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에 자리 잡은 지광국사탑은 6·25 이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의 일이다. 그때 경복궁 경내에 있으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하던 야외 석조물들을 모두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로 옮기기로 했다. 여기에 지광국사탑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광국사탑은 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지광국사탑을 옮기려면 부재를 해체해야 하는데, 상태

가 너무 나빠 해체하다 보면 와르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경복궁에 남게 된 지광국사탑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문화재청은 결국 해체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해체되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 보존 처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보존 처리가 끝난 뒤 이 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의 논의였다.

100여 년 유랑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광국사탑

신중한 논의 끝에, 지광국사탑을 고향인 원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한, 전향적인 결정이었다. 다만 논의할 것이 좀 더 남아 있기는 하다. 원래 자리인 법천사 터로 가느냐, 좀 떨어진 유적전시관(건립 예정) 실내로 들어가느냐를 놓고 관계 당국이 고민 중이다. 원래 위치를 중시한다면 야외의 절터로 보내야 하고, 보존을 중시한다면 전시관의 실내로 보내야 한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어려운 선택이다.

식민통치와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국보 101호 지광국사탑. 어쨌든 그 탑이 100여 년 유랑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국보 59호 지광국사탑비와 재회도 이뤄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문화재만이 전해주는 감동이 아닐 수 없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대한민국 의정 종합뉴스

뉴스N

빠르고 정확한 정치뉴스

예리한 이슈 분석

속 시원한 현안 토론

월~금 저녁 6시 생방송



앵커
강아랑

앵커
김만홍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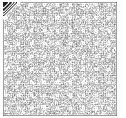


달마사 위 거북바위 전망대에서 본 풍경

전쟁의 역사 위에 피어난 꽃길을 걷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충효길 1·2코스

해마다 6월이면 떠오르는 역사, 6·25 한국전쟁. 전투의 기록이 남아 있는 한강대교부터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까지 걸었다. 그 길에 붙은 이름은 동작충효길 1코스 고구동산길과 2코스 현충원길이다. 1코스의 출발지점은 원래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인데, 전쟁의 기록이 새겨진 한강대교 복단으로 출발지점을 바꾸었다. 2코스가 끝나는 지하철 4·9호선 동작역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동작역 옆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까지 걸었다. 한강대교 복단 한강인도교 폭파 현장을 알리는 동판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의 탑까지 이어지는 7.5km 길에는 전쟁의 역사 위에 피어난 꽃들이 마중하고 있었다.



한강대교 북단 서쪽 인도가 막 시작되는 곳, 바닥에 박힌 작은 동판에 적힌 글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강인도교 폭파 현장이라는 제목 아래 ‘6·25 발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교량 폭파로 피란민 800여 명 사망’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야 했던 역사,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 800여 명의 넋에 고개를 숙이고 한강대교 남단으로 걷기 시작했다.

파란 하늘 아래 한강은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한강철교를 오가는 전철은 평온한 일상의 은유다. 강 건너 여의도 빌딩숲마저 싱그러웠다. 거대한 물줄기 한강의 유장함은 안식이었다. 포연과 선혈의 그날을 다시 떠올리게 한 건 강 건너서 만난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였다.

한강대교 남단 노들나루공원 한쪽에 있는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에 6·25전쟁 초기인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군은 그 기간 동안 현재 양화대교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24km와 김포지

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했다.

국군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7사단, 혼성 제2사단 등이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노량진, 신사리에 이르는 한강 남쪽 강변을 나누어 맡아 북한군 3사단과 4사단, 예비 사단이었던 1사단, 전차 1개 여단 등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6월 29일 한강 밤섬을 장악한 북한군은 흑석동, 여의도, 신사리 일대에서 탐색전을 폈다. 6월 30일 북한군은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으로 도하를 시작했고, 7월 1일에는 여의도~영등포 지역으로 도하를 감행했다. 미 공군기의 지원 폭격도 있었지만 결국 7월 3일 북한군 전차가 노량진과 영등포로 진출하면서 국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 뒷면의 당시 노량진 지구에서 방어 중인 국군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돌아서서 걷는 내내 파편처럼 가슴에 박혔다.



한강대교 북단 노들나루 공원 고구동산 거북바위 전망대 현충원길



고구동산길. 덩굴로 만든 길이 숲으로 나 있다.

초여름 숲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노들역 2번 출구로 들어가서 4번 출구로 나와 돌아서서 걷는다. 상도터널 북단을 향해 걷는 것이다. 터널 위로 올라가는 길을 따르다 보면 동작충효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보인다. 계단을 올라 숲으로 들어간다.

고구동산 조망명소에서 푸른 숲 뒤로 펼쳐지는 한강과 도심, 북한산의 풍경을 보며 잠시 쉬었다 다시 걷는다. 고구동산 넓은 운동장을 지나 이정표에 있는 '현충원 상도 출입문', '중앙대 후문' 방향으로 간다. 중앙대 후문 앞 건널목을 건너 도로 왼쪽 인도로 걷다 보면 다시 숲으로 들어가는 나무 계단이 보인다. 그곳에서 '현충원 상도 출입문', '동작대' 방향으로 걷는다.

초여름 햇볕이 초록빛 숲 위에서 퍼진다. 숲을 가린 나뭇가지와 잎에 여과된 햇볕은 초록색 '빛가루'가 되어 머리 위, 배낭을 멘 어깨 위, 발길 놓이는 오솔길 위에 쌓인다. 넓은 창이 도드라진 모자를 쓴 젊은 여성 몇몇이 소곤거리며 지나간다.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이도 보인다. 중년 부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등산 스틱을 지팡이 삼아 걷는 할아버지, 재잘거리며 뛰어

다니는 아이들.... 6월의 숲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상은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

산 고갯마루 도로 위에 놓인 생태다리(구름다리)를 건너다. 서달산 꼭대기를 향해 가는 것이다. 1920년 일본인 목하영이 서달산 정상부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는 안내판 설명을 보았다. 지금은 우거진 숲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당시 그가 보았던 풍경을 두고 그는 '명수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서달산 정상으로 가기 전에 있는 달마사 위 거북바위 전망대다.

무명용사의 탑 앞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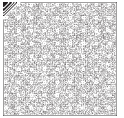
거북바위 전망대로 가는 길 옆에서 연리목을 만났다. 참나무와 벚나무 줄기가 서로 부둥켜안은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 흔치 않는 풍경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거북바위 전망대에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북바위가 있다.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은 거북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다고 한다. 거북바위 아래에서 샘물이 솟는다. 예로부터 거북바위와 샘이 있는 이 터를 용왕궁터라고 불렀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안식을 바랐



숲으로 들어가는 고구동산길 초입



달마사 위 거북바위



국립서울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던 곳이었다. 지금도 이곳을 지나며 두 손 모아 고개 숙이는 이들이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다. 한강이 흘러가는 서쪽으로 시야가 트이고, 정면에 바라보는 풍경에는 서울의 도심을 품고 있는 북한산의 능름한 자태가 있다. 서울 도심을 품고 있는 백악산(북악산), 인왕산, 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땀이 식을 때까지 전망을 즐기고 돌아선다. 서달산 정상인 동작대를 지나 국립서울현충원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을 걷는다. 국립서울현충원 상도출입문에서 동작충효길 1코스가 끝나고 바로 2코스가 이어진다. 이곳부터는 동작역 이정표를 따른다.

이 길에는 ‘메모리얼 게이트’라는 이름의 네 개의 문이 있다. ‘메모리얼 게이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게

이트다. 문은 태극기를 형상화했다. 지붕은 태극 문양이고 기둥은 건, 곤, 감, 리를 표현했다.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짧은 추모 글이 적힌 나뭇조각이 문을 장식하고 있다.

오솔길 옆 국립서울현충원 담장을 따라 장미꽃이 피었다. 장미꽃이 이곳까지 걸어온 사람들을 마중하는 것 같았다. 이 길에 피어난 6월의 장미가 예사롭지 않다. 가파른 내리막 계단을 다 내려서면서 길은 끝나지만 발길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6·25전쟁 당시 군번도 없이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친 교복 입은 학생들을 추모하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앞에 선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학도의용군 중 경상북도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해서 가매장되었다가 발굴된 이름도 알 수 없는 학도의용군 48위의 유해를 모신 무명용사탑 앞에 고개를 숙인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당해 연도일까 당해년도일까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규정 중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두음법칙에 관한 원칙을 밝혀 놓고 있다.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하기 까다로운 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한자어 첫 음절이 ‘ㄴ’으로 시작할 때는 ‘ㅇ’으로, ‘ㄹ’로 시작할 때는 ‘ㄴ’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자어에만 적용하되, 둘째 음절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녀자’와 ‘로인’은 본음대로 적지 않고 ‘여자’와 ‘노인’으로 적지만, ‘미녀’와 ‘경로당’은 본음대로 적는다. 이 규정은 비교적 쉽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공문서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

‘연도(年度)’에 관한 오류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이 있는 바로 그해의 연도’를 가리킬 때는 ‘당해 연도’라고 적어야 하는데, ‘당해년도’처럼 잘못 적는 경우가 간혹 있다. 첫 음절에서 ‘연도별’이나 ‘연차별’처럼 적는 것과 둘째 음절부터 ‘학년도’나 ‘안식년’처럼 적는 것은 모두 두음법칙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년도’라고 적어도 될 것 같지만 ‘당해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띄어 쓰는 순간 ‘연도’는 셋째 음절이 아니라 첫째 음절에 사용된 말이 되므로 ‘당해 연도’처럼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2020년도’라고 할 때는 ‘년도’라고 적는 걸까? 그것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는 명사가 아니라 의존명사이며 해를 뜻하는 말 뒤에는 ‘년도’라고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년도’나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처럼 이미 한 단어가 된 복합명사는 띄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음절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연도’라고 적을 이유가 없다.

그 다음으로 ‘율(率)’에 관한 오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나 객관적인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비율’이나 ‘확률’을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분답율’, ‘인상율’, ‘승인률’ 중에 올바르게 표기한 말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두음법칙 규정에 따르면 둘째 음절부터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승인률’만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열/률’은 ‘열/율’로 적어야 한다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즉 ‘분답’이나 ‘인상’은 ‘ㄹ’ 받침과 ‘ㅇ’ 받침을 가진 말이므로 예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원래 규정대로 ‘분답률’과 ‘인상률’로 적어야 하지만, ‘승인’은 ‘ㄴ’ 받침을 가진 말이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승인율’이라고 적어야 한다.

‘양(量)’이나 ‘단(欄)’의 표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먹이량’, ‘스트레스량’, ‘윗란’, ‘가십란’ 중에 올바르게 표기한 말은 무엇일까? 원래 두음법칙 규정을 따른다면 모두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예외 규정에 따른다면 ‘먹이량’과 ‘스트레스량’만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잘못된 표기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붙임 4] 규정을 보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오는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보고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와 ‘위’는 고유어이고, ‘스트레스’와 ‘가십’은 외래어이므로 ‘먹이양’, ‘윗난’, ‘스트레스양’, ‘가십난’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여야 원내대표 선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020. 5. 1. ~ 5. 31.

- 2 • WHO, “코로나19 팬데믹,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공개 활동
- 3 • 청와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술 안 받아”…부정확한 정보 확산 경계
- 4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개시…시급한 280만 가구부터
• 코로나19에 한계 드러난 고용보험…‘모든 취업자 적용’ 공론화
- 6 •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 7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 선출
- 8 •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투표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가결…84.1% 찬성
• 국방부, 통제 76일 만에 장병 휴가 정상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에 충북 청주 선정”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에 이종배 의원 선출
- 1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특별연설
- 11 • 유치원·초중고교, 등교 일주일씩 연기
- 12 •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
•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의원 임명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전망 ‘안정적’
- 13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반 카드결제와 동일 혜택 받아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갯갯’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 14 • 공공일자리 156만 개 긴급제공…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재개
• 용산 한강로동·이촌2동 정비사업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6 •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공무원 5급 공채시험 실시
- 18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거행
- 20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
•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 고3 등교 첫날, 전국서 유증상 학생 127명 발생
- 21 • 중국 양회 오늘 개막…‘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집중 논의
• 검찰, 부실회계 논란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압수수색
- 23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엄수
- 25 •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 만에 개편
•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력정지 한달 연장
- 26 • 여야 원내대표 회동…원구성 협상 본격 착수
•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합당 결정…위성정당 소멸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8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 제72주년 국화개원기념식 개최

정리. 김현아

제21대국회의 사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5개월째 기세등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 출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과의 양립 모색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유럽, 미국은 각각 3월부터 시행한 전면적인 봉쇄(셧다운)를 앞다퉈 완화 또는 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최고봉인 후지산(3,776m)의 한여름 등산을 60년 만에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가나가와·지바 등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긴급사태는 단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시행되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뒤 시민들의 긴장이 이완되면서 우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두 명의 방심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5월 내내 봤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의 방심으로 서울시내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이 연쇄 감염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한 전 국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유행 경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더 인내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코로나 대처 능력을 좀 더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류센터 관련 연쇄감염 우려로 수도권 모든 부문 방역관리가 강화됐으니 바짝 긴장해야겠지요. 광활한 숲은 나무 등이 그물망처럼 상호작용을 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듯,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도 사회구성원들의 인내와 배려, 연대가 필수입니다. 우리의 국민적 역량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막 출범한 제21대국회도 ‘코로나 출구’를 모색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조심조심 절차를 밟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도 전원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제21대국회에는 코로나 극복 시스템 구축이라는, 역대 국회와는 다른 막중한 사명이 지워져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요. 국회보 6월호는 ‘코로나 출구’에 대한 희망을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코로나는 겨울과 봄, 초여름까지 잔인한 계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국회는 꾀꼬리, 뻐꾸기 등 철새 소리로 평화롭습니다.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갈 가을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眞·景_진짜 풍경〉

- 기 간 : 2020. 6. 2.(화) ~ 6. 26.(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작 가 : 임상희
- 전시품 : <야자의 심장>등 회화 21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6788-2296

